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왜 필요하나

하늘-땅 연결 교통·산업·관광 시너지 효과

대체 교통시설 불필요 중복투자 없애 국내외 관광객 흡수 공항 활성화 도움

호남고속철도 사업이 지난 24일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전남도가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와 지역민들의 요구에 광주~목포 간 경유노선 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이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종 결정 여부가 나와야 하겠지만,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와 지역민들의 요구에 광주~목포 간 경유노선 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이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종 결정 여부가 나와야 하겠지만,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 항공과 고속철도 교통 수요가 연계되지 않아 공항 이용객과 고속철도 이용객들의 불편과 부담이 커지고, 다시 이를 연결해야 하는 대체 교통시설 등의 중복투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무안국제공항이 호남고속철도와 연계될 경우 국외적으로는 이용객이 확대돼 항공화물 및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국내적으로는 수

도권과 중부권 이용객들의 접근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따라서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는 무안공항 활성화뿐만 아니라 공항·산업·관광 인프라 등과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수요 효율적 대처=전남지역은 J프로젝트 개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및 무안기업도시 조성, F1 그랑프리대회 개최, 조선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차분하게 진행중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전남지역의 유통 인구는 급증하고 교통수요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는 앞으로 교통수요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목포·무안·신안 등 무안반도 통합시대에 대비한 기간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무안공항 경유의 타당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과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함께 이뤄진다면 지역개발의 획기적인 동력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교통 수요와 고속철도 교통 수요가 연계돼 새로운 교통 편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우선 이동성과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면서 해양과 내



무안국제공항이 동북아 로컬 허브(Hub)공항을 목표로 개항했지만 교통 접근성 미비 등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탑승객이 크게 주는 등 침체돼 있다. 무안공항은 개항 첫 해인 2007년 12억4천800만원, 2008년 71억3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무안공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륙, 산업 등이 어우러진 다기능 레저 관광 및 휴양시설 조성할 수 있게 돼 중국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낙후된 호남권의 수송 능력 증대와 물류비용 감소가 이뤄져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무안공항 활성화 '호기'(好機)=무안국제공항이 호남고속철도와 연계되면 호남권 중추공항 역할과 동시에 동아시아 관련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와 무안국제공항이 연계될 경우 저가항공사를 이용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출·입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은 내륙을 잇는 고속철도를 통해 국내 관광에 나서고, 내국인들은 고속철도를 통해 저가항공을 이용한 저렴한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게 될 경우 전

북과 충청권 항공 수요도 흡수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저가항공사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수도권 국제공항과의 차별화를 꾀하게 되면 수도권 항공수요도 무안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태양광·풍력·광기술·친환경차 4개 산업, 지역 녹색성장 이끈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 3년간 1,800억 투입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로 구성된 호남광역경제권(이하 호남권)이 본격 추진하는 선도사업은 이들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8일 출범하는 호남광역권 선도사업 지원단이 추진하는 호남권 선도사업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친환경(첨단)부품소재(광기술·친환경 자동차) 등 2개 분야 4개 산업이다.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이들 산업은 세계적인 추세인 녹색성장에 맞춰 지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4개 프로젝트에 332억원과 추가 50억원을 확정했다. 하반기에는 사업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등 향후 3년간 약 1천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2011년 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권역내에서 수출 12억달러, 3천여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남권의 4대 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경우 ▲동북아 태양광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서남해안

풍력산업 허브구축사업, 친환경(첨단) 부품 소재 부문은 ▲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부품 소재 육성 사업 ▲고효율·저공해·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품소재산업육성사업 등이다.

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 산업 육성사업으로는 광기술기반 융합 조리기재 부품 및 시스템 개발, 농생명 응용 LED 조명 및 시스템 개발이 추진된다.

고효율·저공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육성 사업의 과제는 전기 자동차 동력 및 제어시스템, 전지시스템 세시, 차체 및 HVAC 시스템의 각종 부품 개발이 주 내용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새 검찰총장 인선 호남 패심죄?

근거 없는 청문회 제보설 등으로 유력 후보들 후순위 밀려

청와대가 공석중인 검찰총장 후보자를 놓고 비영남권 출신 검찰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인선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총장 후보자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이후 정국수습 카드로 검찰총장 인선에서 영남 출신을 배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선 '호남 출신 동반 배제론'이 제기돼 논란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 주 중반 5~6명의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을 마치고 최종 후보 2~3명을 대상으로 막바지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르면 27일 검찰총장 후보자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전례를 감안, 재산문제와 도덕성 논란이 적은 인물 가운데 비영남권 출신 후보를 적극 고려해왔다. 또 지난 22일

미디어법 처리 이후 'TK(대구·경북 독식)'이라는 비난을 빚기 위해서라도 비영남권 출신 인사의 총장 내정설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하지만 최근 호남 출신 인사들이 총장 후보에서 배제됐다는 설이 급속히 퍼지면서 호남권 법조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천 전 후보의 국회 청문회과정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내부정보를 넘겨준 쪽이 호남 출신 관료인맥이라고 파악했고 이때문에 호남권 인사를 총장 후보군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유력 총장 후보군으로는 김준규(54·서울) 전 대전고검장과 문효남(54·부산) 전 부산고검장, 신상규(60·강원 철원·이상 사시 22회) 전 광주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문성우(53·광주·사시 21회) 전 대검찰청 차장과 이귀남(58·장흥·사시 22회) 전 법무부 차관 등이 'TK' 출신인 권재진(56·대구·사시 21회) 전 서울고검장과 유력 후보

군을 형성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호남 출신이 갑작스레 후 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는 '영호남 동반 배제론' '청문회 제보 패심죄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 전 차장과 이 전 차관 등은 조지내 두터운 신망과 융화력 등을 바탕으로 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가 확인되지 않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보 등을 이유로 호남 인맥을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미디어법 강행 처리 등으로 일어불은 정국을 풀어가기 위해서라도 화합과 도덕성 등을 최우선적 인사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되는 대로 고검장 및 검사장급 검찰 간부에 대한 후속 인사를 곧바로 단행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내달중 방송 사업자 승인신청 접수·심사”

최시중 방통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신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나 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정된 신규 사업자들에게 대해서는 미디어산업 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가급적 8월 중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발표한 뒤 사업자 승인

신청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어떤 희망자도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라며 방송법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경쟁력, 세계적 안목, 공익성에 대한 존중심, 인력과 재원의 효율적 운용, 콘텐츠 개발력 등을 우선적으로 심사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3개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는 통신시장처럼 지상파나 종편, 보도채

널도 3개가 돼야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면서 종편 채널은 처음 도입되는 상황인 만큼 단계적으로 사업자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현재 2개인 보도 채널은 1개 정도 늘리며 종편 채널은 2개 사업자를 허용해주고 사업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또 "미디어관련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이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